

2025년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인 추진과 적극적 예산편성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체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2024. 8. 2



전국협동조합협의회

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of Korea

## 2025년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인 추진과 적극적 예산편성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체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1.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협동조합 협의회와 업종협동조합 연합회들간의 협의체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변활동과 협동조합 상호간의 연대협력을 위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연합조직입니다.
2. 2023년 3월 정부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본격적인 이행기라 할 2024년 협동조합 분야 예산을 90% 삭감(예산안 기준)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한 순간에 변동시킴으로써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의미와 실효성이 크게 퇴색,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협동조합 일선의 실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혼란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3. 최근 발표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섹터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기여가 크게 확장, 확대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에서 지역을 다시 활성화할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노인, 장애인, 사회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공동체의 공동의 부를 축적하고 지역에서 순환하는 경제활동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4년 협동조합 예산을 90% 삭감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기반마저 허물어뜨린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은 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상황, 성과를 거버넌스에 기초해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을 비롯한 협동조합 정책의 급격한 퇴보의 문제점에 대해 시급히 진단,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5. 관련하여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일선 협동조합 리더 그리고 관계 전문가 백한(101)명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협동조합 일선의 평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을 주무주처인 기획재정부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6. 올해 7월 6일은 백두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내년 2025년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2012년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한국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내년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는 한국 협동조합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정책의 조속한 정상화, 충분한 예산의 편성,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부터 올해 사이 협동조합 정책의 난맥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협동조합 정책이 정상궤도로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오니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여주시길 요청합니다. 협동조합 현장의 열망과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백두번째의 응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2024. 8. 2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박남수, 공동대표 손종현, 연정민, 임종한)

## 2025년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인 추진과 적극적 예산편성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체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1.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평가 조사결과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평가의견	(매우 충분)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매우 충분하게 반영, 제시하고 있다.	7	6.9%
	(충분)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비교적 충분하게 반영, 제시하고 있다.	35	34.7%
	(불충분)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반영, 제시하고 있다.	43	42.6%
	(매우 불충분)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전혀 반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6	15.8%

-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정계획임, 정부는 2023년 3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함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❶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❷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❸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❹ 인프라 개선, 협동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4대 전략과제로 제시함
- 이러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비전-전략과제)에 대한 평가는 (매우)충분하다는 의견이 42명, (매우)불충분하다는 의견이 59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수였음.
- 비교적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이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비해 협동조합의 규모화 등 성장지원, 자금조달 등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의 확대 등의 적극적 활성화 정책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에 비해 퇴보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기본법 시행 이후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규 설립 등의 양적인 확대보다 협동조합의 성장, 질적 심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비전의 구체성, 실효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	매우 높음	13	12.9%
	비교적 높음	36	35.6%
	낮음	40	39.6%
	매우 낮음	12	11.9%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매우)높다는 의견과 (매우)낮다는 의견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전략과제1의 구체성, 실효성 평가(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매우 높음	8	7.9%
	비교적 높음	25	24.8%
	낮음	48	47.5%
	매우 낮음	20	19.8%
전략과제2의 구체성, 실효성 평가(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매우 높음	11	10.9%
	비교적 높음	37	36.6%
	낮음	39	38.6%
	매우 낮음	14	13.9%
전략과제3의 구체성, 실효성 평가(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매우 높음	11	10.9%
	비교적 높음	37	36.6%
	낮음	37	36.6%
	매우 낮음	16	15.8%
전략과제4의 구체성, 실효성 평가(인프라 개선, 협동조합의 투명성 강화)	매우 높음	9	8.9%
	비교적 높음	24	23.8%
	낮음	55	54.5%
	매우 낮음	13	12.9%

- 4대 전략과제 중 전략과제1(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제4(인프라 개선, 협동조합의 투명성 강화)의 경우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음.
- 4대 전략과제 중 전략과제2(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전략과제3(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매우)높다는 의견과 매우(낮다)는 의견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음.
- 특히, 전략과제1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성장, 발전,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전략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낮다는 평가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확인됨. 협동조합이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경쟁력을 높일 방안, 정책들이 보다 적

극적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이행기간에 보완, 강화되어야 할 것임.

기본계획의 이행, 실행성과에 대한 평가	(매우 충실) 차질없이 충실하게 이행, 실행되고 있다.	1	1.0%
	(충실)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 실행되고 있다.	8	7.9%
	(불충실) 제대로 이행, 실행되지 않고 있다.	54	53.5%
	(매우 불충실) 전혀 이행, 실행되지 않고 있다.	38	37.6%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제 이행성과, 실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응답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총 응답자 101명 중 9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이전의 기본계획에 비해 비전이 후퇴하고 전략과제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퇴보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전략과제 및 구체적 사업들을 2024년 협동조합 예산을 90% 삭감(예산안 기준)함으로써 기본계획이 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력화되고 지원체계를 근간부터 무너뜨린 점이 부정적 평가의 결정적 원인이라 할 것임.
-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주무주처인 기획재정부 그리고 한국 최고 협동조합 정책 심의기관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의 형해화, 대책없는 예산 삭감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협동조합 당사자들과 숙고하여 문제를 개선,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해야 할 것임

현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1점) 매우 매우 잘 못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68	67.3%
	(2점)	22	21.8%
	(3점)	8	7.9%
	(4점)	3	3.0%
	(5점)매우 잘 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스럽다.	0	0.0%

- 본 문항은 5점 척도로 현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문항으로서 응답자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1.47점에 불과함. 응답자 절대다수가 '매우 잘못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2025년 협동조합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2022년,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63	62.4%
	2022년,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27	26.7%
	2024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해도 무방하다.	2	2.0%
	기타	9	8.9%

- 2024년에 이어 2025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추진예산의 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62.4%에 달하는 63명의 응답자는 2022년, 2023년에 예산 수준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26.7%, 27명의 응답자는 최소한 2022년, 2023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2.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관련하여 아래의 표는 제5차 및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한 자료임

실태조사 항목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0년 기준, 2022년 발표)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22 기준, 2024년 발표)	증감
설립된 협동조합	19,429개	23,892개	23% 증
운영중 협동조합	8,926개	10,976개	23% 증
조합원	493,004명	622,410명	26% 증
종사자	133,290명	189,053명	42% 증
고용	평균 5.4명	평균 6.8명(총73,992명)	26% 증
자산	평균 2억4,970만원	평균 3억4,739만원	39% 증
자본	평균 6,060만원	평균 1억1,227만원	85% 증
출자금	평균 4,763만원	평균 5,382만원	13% 증
부채	평균 1억8,460만원	평균 2억3,512만원	27% 증
매출액	평균 2억9,512만원	평균 3억7,470만원	27% 증
당기손익	평균 (-)433만원	평균 (+)118만원	흑자전환

\*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4. 5. 17)를 토대로 재구성

-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년(19,429개)에 비해 23.0% 증가했으며, 2022년 현재 운영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020년(8,926개) 대비 23.0% 증가함
- 협동조합의 조합당 평균 자본은 1억 1,227만원, 매출액은 3억 7,470만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20년 적자(△433만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음
- 조합원은 총 622,410명, 임금근로자는 73,992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6.2%, 54.4% 증가함

- 조합원들이 협동의 힘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의 자산은 2020년 2억 4,970만 원에서 2022년 3억 4,739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증가함
- 부채(2020년 1억8,460 -> 2022년 2억 3,512만원)도 증가했는데 자산, 자본의 증가에 비해 부채의 증가 규모가 작은 점도 고무적인 변화임.
- 2022년과 2024년 실태조사 사이의 변화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협동조합의 저변이 넓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점 뿐 아니라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것임. 지역사회 공동의 부로 기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산이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고 매출, 손익 등의 경영실적도 개선, 내실화되고 있음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다른 기업유형과 비교시 협동조합은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10억원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평균 3.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매우 훌륭한 정책성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협동조합은 조직 특성상 영리기업과 달리 외부 자본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고, 대규모 정책적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스스로의 자조와 협동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4년 실태조사 사이 2년간 26,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음(2020년 데이터 기준 4만 8천여 명에서 2022년 데이터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2만6천명 순 증가)
- 기획재정부의 1년 협동조합 정책 예산 75억원(2023년 예산 기준)을 협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교육, 창업, 판로 지원 및 중간지원 등의 간접지원)이자 협동조합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할 때 벤처기업의 투자대비 고용창출 성과에 비해 무려 500배에 달하는 정책효과를 전국의 협동조합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이같은 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협동조합 예산을 90% 삭감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체계의 근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너뜨렸음
- 지난 십여년간 협동조합 생태계가 진화,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민관협력 기반 협동조합 지원체계를 붕괴시킨 것 역시 매우 큰 정책적 오류임
- 그 여파와 혼란, 부담은 고스란히 일선의 협동조합들,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에 전가되고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

히 시정해야 할 문제임

- 무엇보다 2024년의 심각한 오류를 202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복구하고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이 함께 이뤄져야 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인식여부	알고 있다.	51	50.5%
	모른다.	50	49.5%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역할에 대한 평가	(매우 충실) 매우 충실하게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1	1.0%
	(충실) 비교적 충실하게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7	6.9%
	(불충실) 비교적 불충실하게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12	11.9%
	(매우 불충실) 매우 불충실하게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13	12.9%
	(평가 불가)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알지 못하고 공개되는 정보가 없어 평가, 판단할 수 없다.	68	67.3%

-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법 제11조의 2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이행에 있어 90%에 달하는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기본계획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됨. 그러나 본 평가조사 결과를 보면 겨우 절반 정도의 응답자만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평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임
- 2024년 예산편성 과정의 심각한 문제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정상적인 실행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역할 역시 정상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본 조사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1) 협동조합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위원회의 현장성 강화 2)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필요 3) 위원회의 의안,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이 제안되었음

[참고1]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협동조합 정책 평가조사의 개요

응답자 연령	50대	41	40.6%
	70대	2	2.0%
	40대	25	24.8%
	60대	18	17.8%
	30대	13	12.9%
	20대	1	1.0%
	미응답	1	1.0%
응답자 성별	남성	64	63.4%
	여성	35	34.7%
	미응답	2	2.0%
응답자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8	27.7%
	경기도/인천광역시	42	41.6%
	강원특별자치도	4	4.0%
	충청남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 특별자치시	10	9.9%
	제주특별자치도	1	1.0%
	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울산 광역시/부산광역시	8	7.9%
	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광역시	8	7.9%
응답자 활동기관	협동조합 및 연합회, 협의회 등 당 사자 연대연합조직	67	66.3%
	협동조합 지원기관(민간지원조직, 중 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조직 등)	19	18.8%
	협동조합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또는 연구자	14	13.9%
	기타(공공기관)	1	1.0%

응답자 : 협동조합 당사자 조직 리더, 지원기관 활동가, 연구자 총 101명

조사기간 : 2024년 5월 23일 ~ 2024년 6월 19일

조사기관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 3.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과 2025년 예산편성의 방향

#### 1)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의 점검

- 정부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발표했음. 관련하여 정부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이에 기본계획 이행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 하반기에 심도있는 이행점검과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막중한 책무임.

#### 2)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2025년 예산의 적극적 편성

- 우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에 있어 충분한 예산이 편성,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폭이 80%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겨우 75억원(2022년, 2023년 예산기준)에 불과한 협동조합 예산의 90%를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었음.
- 올해, 내년 2025년 예산 편성시에는 이같은 일의 재발되지 않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확인해야 정부와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협동조합의 성장과 질적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과제1, 전략과제2, 전략과제3에 딸린 세부 정책과제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되어야 함 (2022년, 2023년 협동조합 예산(연 75억원)의 두배 정도의 예산 편성 필요, 세부 실행계획은 참고2 참조)
- 또한 전략과제 4에서 중간지원기관 역할의 효율화를 제시하였으나 대책없이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을 폐지하여 현장의 혼선과 혼란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의 모색을 시급히 해야 할 것임

### 3)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요청

#### (1) 2023년, 2024년 협동조합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내역	2023년 (확정)	2024년 (정부안)	2024년 (확정)
총액	7,508	780	1,580
출연(진홍원)	6,045	500	1,100
교육	453	0	200
설립인가(중간지원기관 등)	2,500	70	70
감독 및 경영공시	573	390	490
판로지원 및 홍보	603	40	240
사업화 지원 및 평가(창업지원사업 등)	1,686	0	0
협동조합 정책개발 등	230	0	100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70	253	253
기타 사업비	1,093	27	227
협동조합의 날 행사	460	0	200

- 2024년 협동조합 사업예산(국회 심의 후 확정)은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본격 이행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79% 삭감된 15억 8천만원에 불과. 심지어 최초 정부의 예산(안)은 2023년 대비 90%를 삭감한 7억 8천만 원을 편성 (기본계획의 중점 세부 사업과제인 교육사업, 설립지원사업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행정만을 위한 예산 편성)

#### (2) 2025년 협동조합 예산 편성 중점분야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

- 2025년 협동조합 사업예산 편성시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통해 이미 정부가 제시하고 있음. 1) 이에 더하여 고려할 사항은 협동조합 설립총수가 24,000여개로 정책대상 자체가 크게 늘어난 점과 2)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보다 진취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성장과 질적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략과제1, 전략과제2, 전략과제3에 딸린 세부 정책과제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되어야 함 (2022년, 2023년 협동조합 예산(연 75억원)의 두배 정도의 예산 편성 필요, 정책대상의 양적 증가, 성장기 협동조합에 대한 실효적 정책의 필요성 증대)
- 또한 전략과제 4에서 중간지원기관 역할의 효율화를 제시하였으나 대책없이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을 폐지하여 현장의 혼선과 혼란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대안이 시급함

3) 2025년 예산 편성 시 중점분야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 (단위 억원)

기본계획 세부 실행과제	중점 사업	2025년 예산편성의견
전략과제1_자생력확보를위한지 원체계구축	신규 설립지원 및 유형/단계별 성장지원사업	25억원
전략과제1_판로지원확대	판로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사업	20억원
전략과제1_협동조합조합원역량 강화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훈련 지원사업	10억원
전략과제2_사회적서비스공급주 체로참여확대	통합돌봄 등 신규 사업모델개발 및 사회적서비스 콘소시엄 시범사업	10억원
전략과제2_조합원상호부조활성 화	제도정비(비예산사업)	-
전략과제2_우수협동조합사례발 굴및홍보	2025 세계 협동조합의 해 기념사업 우수 협동조합 발굴 및 홍보	5억원
전략과제3_협동조합연합회역량 기능강화	성숙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협의회, 연합회 기능강화 (창업지원, 업종전문상담, 컨설팅)	25억원
전략과제3_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확대	제도정비(비예산사업)	-
전략과제3_협동조합유관조직간 연대강화	부처간 협력 강화 (정책협의, 유관 공무원 교육 등)	0.5억원
전략과제4_협동조합생태계투명 성강화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 경영공시 교육사업	5억원
전략과제4_협동조합정보접근성 신뢰성제고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5억원
전략과제4_중앙-지방협업체계 강화	중앙-지방 협력 강화 (정책협의 및 유관 공무원 교육)	0.5억원
전략과제4_중간지원기관역할효 율화	협동조합 지원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및 전문 상담지원체계 복구 가동	10억원
전략과제4_미운영협동조합정비	협동조합 통계체계개발 및 협동조합섹터의 소셜임팩트 측정연구 협동조합 정책연구 등 정책개발	5억원
<b>총액 합계</b>		<b>121억원</b>



【전략3】 연대 ·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b>3-① 협동조합 연합회 역량 · 기능 강화</b>				
①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연합회 참여 확대				기재부
②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으로 연합회의 역할 강화				기재부 지자체
③ 연합회 존재 및 우수 활동 사례 홍보 강화				기재부 지자체
<b>3-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확대</b>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개별법 협동조합 확대 추진 검토				기재부
<b>3-③ 협동조합 유관 경제조직 간 연대 강화</b>				
① 유관 부처 간 소통 활성화				기재부 지자체
② 부처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재부
【전략4】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제고				
<b>4-① 협동조합 생태계 투명성 강화</b>				
① 경영공시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재부
② 중간지원기관 운영 개선				기재부
<b>4-② 협동조합 정보 신뢰성·접근성 제고</b>				
①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한 협동조합 통계의 품질 제고				기재부
② 협동조합 정보포털 고도화				기재부
<b>4-③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b>				
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기재부 지자체
②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지원				기재부 지자체
<b>4-④ 중간지원기관 역할 효율화</b>				
① 광역 중간지원기관				기재부
②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b>4-⑤ 미운영 협동조합 정비</b>				
○ 미운영 협동조합 관리 · 감독 강화				기재부

#### 4.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및 질적 성장발전을 위한 주요 제도정비과제

##### 1)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및 상호성 기준과 연계한 세제정비

- (일반)협동조합의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
- 기본법 협동조합의 상호성 기준의 정립
- 기본법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상의 차별, 근거법령에 따른 편차 해소

##### 2)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탁의 타법인 출자 허용
- 연합회의 회원범위 확대 : 연합회의 연합회 회원가입 허용
- 협동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참여범위 확대

##### 3)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주체,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 제도정비

- 중소기업정책 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 금융접근성, 포용성 제고
-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전환 및 규제 개선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격화에 발맞춘 협동조합의 역할 확대
- 세탁업 협동조합의 공동 세탁장 산업단지 내 설치 허용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택시산업 관계법령 정비

##### 4)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해소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정비

-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노동자(직원)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상의 차별 해소 (상호성 기준 정비와 연계)
- 총회 의사록 인증의무 제외법인에 협동조합 포함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협동조합 총회 허용
- 조직변경 시 취득등록세 부과이슈 및 전원동의 요건의 완화
- 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
-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중과면제

##### 5) 협동조합의 활로 개척에 기여하는 좋은 거버넌스 구축

- 협동조합의 활로를 여는데 중요한 과제 상시발굴 및 개선활동 추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내실화 (상향식 의제발굴, 회의공개)
- 협동조합, 국회, 정부(진흥원)를 연계하는 삼각 협력체계 구축